

건설소식

CONSTRUCTIONNEWS

'지속 가능한 건설' 조기 추진

정부, 관계부처 공동지침 운영 지역단위 사전환경성검토 강화

국토와 환경계획간 연계 강화를 위해 수립과 협의절차 등을 포함한 관계 부처 공동지침이 운영된다.

또 난개발 지역에 대한 지역단위 사전환경성검토가 강화되고, 개발 유도지역의 개발권을 부여하는 개발권양도제 도입이 검토된다.

노무현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환경부와 건교부, 해양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했다.

개발사업 확대에 인한 환경 훼손, 환경 부하의 대도시 집중,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번 회의는 국토와 환경정책을 연계 통합하는 국토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국토 구현'에 목표를 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 △지역환경 특성을 고려한 국토관리체계 마련 △국토관리의 지속 가능성 평가 △국토·환경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핵심 정책과제로 확정됐다.

먼저 정부는 국토와 환경계획간

연계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공동으로 수립과 협의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고 환경과 연안관리계획은 서로 연계 작성한다.

또 일부 택지와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때 일정 규모 이상은 임의로 수립 중인 사업환경계획 작성을 제도화하고 생태·환경 정보 구축을 위해 도시생태·환경지도 작성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이를 환경보전과 도시계획에 활용한다.

환경용량과 지역환경특성을 고려한 국토관리 기반 구축과제로 보전 가치가 높은 녹지와 습지 등에 대한 순손실방지원칙 선언과 자연자원 총량관리제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 환경용량과 개발가능용량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도시의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현행 도시계획을 삶의 질을 증시하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전환하는 계획수립체계를 구축한다.

자연생태복원과 수질, 대기질, 등 환경개선에 목적을 뒀 지속 가능한 지역·도시환경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발 유도지역의 개발권을 부여해 이를 매각 또는 직접 행사하는 개발권양도제 도입을 검토한다.

자연환경 우수지역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생태계 보전협력 금제 부과기준과 교부체계, 지자체 예산 편성지침 개선 등 난개발 억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아울러 국토관리의 지속 가능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단위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검토를 거친 사업은 환경성평가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제기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확인하도록 제도화하고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이평가제 등의 평가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바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양부의 해역이용협의로 일원화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구체화한다.

이밖에 국토·환경관리 거버넌스 구축과제로는 지역 발전계획과 환경계획 수립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 개발 관련 각종 심의기구에 시민대표 등의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회의록을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관계부처는 오는 2008년까지 이번 결정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일정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조짐

수주·허가면적 등 지표 '빨간불'

1전반적인 건설투자 지표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일한 플러스 실적인 기성도 0.9% 증가에 머무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밝힌 대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재정집행을 늘릴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5월 건설경기 지표에 따르면 건설수주는 감소세가 지속됐고, 건설기성은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1~2월 두 달 동안 증가세를 보이던 수주 실적은 3월부터 곤두박질치기 시작해 5월까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다.

3월 수주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30.9%의 마이너스를 보인 후 4월 -18.8%, 5월 -17.9% 등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토목부문은 2월을 제외하고 40%대의 급감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건교부는 “공공·토목 부문의 수주감소는 올해 들어 상·하반기 균형집행 기조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하반기부터 공공발주가

증가하며 건설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건축허가면적은 21.2% 감소하며 4월의 -8.2%보다 감소폭을 확대했다.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39.1% 급감하며 급감세를 주도했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용 허가면적이 44.6%나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5월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도 전 달 13.3%의 증가에서 49.6%의 감소세로 급전환했다.

경기 동행지표인 기성은 건설지표들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5월에는 0.9% 증가에 그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종 건설경기 지표가 악화되자 정부는 재정 집행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토목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있다”고 지적했고, 이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투기를 자극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 부총리는 “하반기 재정사업 지출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라도 차질 없이 집행 하겠다”며 “경기 성남 판교나 서울 세곡 우면지구·송파 거여지구 등에서도 지구 지정을 빨리 시행해 건설경기를 보완 하겠다”도 밝혔다.

재정부는 “건설경기가 당분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집행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도 공공부문 발주가 하반기

로 갈수록 늘어나고, 특히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 대형 균형 발전 프로젝트들이 가시화되면 건설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측했다.

건교부는 현 시점에서는 만자유치 활성화와 주택건설 확대 등 건설경기를 진작 시키기 위해 마련된 기존의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주요 건설경기 지표 증감률 추이

(단위: %)

구분	'05.2분기	3분기	4분기	'06.1	2	3	'06.1분기	4	5
건설수주	38.5	15.8	△17.9	10.9	22.2	△34.5	△9.7	△18.8	△17.9
건설기성	9.6	3.8	6.9	2.5	9.2	5.9	5.8	2.0	0.9
건축허가	△0.6	△11.0	△8.2	2.6	32.3	10.8	13	△8.2	△21.1
주택건설	25.8	△26.6	△5.9	1.4	65.3	△20.4	7.7	7.4	△49.8

건설수주액 변화추이

(단위: %)

구분	'05.2분기	3분기	4분기	'06.1	2	3	'06.1분기	4	5
건설수주	38.5	15.8	△17.9	10.9	22.2	△34.5	△9.7	△18.8	△17.9
건축	36.0	21.3	△1.1	45.2	6.4	△30.9	△1.9	△9.8	△6.5
토목	47.8	1.5	△41.8	△40.1	78.7	△40.6	△22.6	△43.9	△49.1

건축허가면적 변화추이

(단위: %)

구분	'05.2분기	3분기	4분기	'06.1	2	3	'06.1분기	4	5
건축허가	△0.6	△11.0	△8.2	2.6	32.3	10.8	13	△8.2	△21.1
주거용	9.4	△4.7	△14.0	△0.1	78.6	11.0	19.5	△14.8	△44.6
비주거용	△7.8	△14.9	△1.8	5.1	8.3	10.6	8.3	△3.5	5.3

하도급관리 대폭 강화한다

건교부, 전국에 신고센터 설치 내년부턴 정보망도 구축·가동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설치되는 등 하도급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내년부터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관련 내용을 직접 입력하고 원도급자와 발주자가 확인하는 정보망이 구축돼 가동에 들어간다.

건설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적발시스템 강화를 골자로 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우선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토록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국토청에 신고센터가 설치돼 즉각 운영에 들어가며 제보가 들어오면 사전조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법규에 따라 처분한다.

사전조사는 건교부가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사수행정보와 보증정보, 실적정보를 조회하는 것이며 현지조사는 본부와 지방청에서 공사현장을 방문, 서류조사와 공사참여자 면접조사 등을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를 통해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센터는 증빙서류를 첨부, 처분청인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사전통지와 청문, 처분결정 등의 진행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건교부는 건설업체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도 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요청한 상태여서 신고센터가 전국에 걸쳐 생겨날 전망이다.

대구시의 경우 6월부터 건설산업노조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매주 방문, 신고사항을 조사·접수하고 있다.

내년에는 하도급 정보망을 구축, 불법하도급을 감시하기로 했다.

선별적인 현장점검 위주의 하도급 단속이 불법하도급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하반기에 하도급정보망을 구축, 내년 중 가동에 들어가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하도급 정보망에는 대부분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업체와 계약금액, 기성금 지급실적 등의 각종 하도급 정보가 담기며 대부분의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무엇보다 정보망은 하도급업체가 직접 내용을 입력하고 원도급자와 발주자의 확인을 거치는 형태여서 불법하도급이 횡행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사라진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 손태락 건설경제팀장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공사비 누출로 인한 부실시공과 시장질서 교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신고센터 운영이 본격화되고 공공발주자에 의한 불법하도급 감시가 강화되는 내년부터는 다단계하도급 문제에 대한 가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뇌물과의 전쟁’ 지금부터

발주기관 제재수위 갈수록 높아져 200만원에 1년 입찰금지 결정도

공공 발주기관의 뇌물제재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에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시설공단 직원에게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대형건설사인 S사는 11일 발주기관으로부터 1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을 소지도 있어 200만원이라는 금품 규모의 대가로는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된다.

최근 5년 이내에 뇌물수수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면 1차

경고처분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U사는 건교부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몇 년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돼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건교부는 해당 건설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징계처분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적어도 6개월 안팎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또 K사는 2004년 건교부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수백만원의 판돈을 제공,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6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H사가 재건축과 관련해 10억원대의 뇌물을 준 것으로 경찰이 발표하면서 처리방향을 둘러싸고 업계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금품액수의 규모와 관계없이 뇌물수수업체에는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건설업계와 발주기관에 비상이 떨어졌다.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뇌물수수 방지대책으로 집단결재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안마련에 나섰다.

10개 현장의 감독관을 철수시켜 업체와의 단독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여러 공무원이 한 현장의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바꾼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영업을 마비시키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건산법 개정으로 뇌물죄의 경우 최대 영업정지 1년까지 처분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후 저마다 전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제재강도가 커짐에 따라 철저한 임직원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든 건산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이든 해당 업체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뇌물수수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투명 경영시스템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꾸준히 시행해 각성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공사 선별수주 움직임

건설사들 '묻지마' 입찰 자제

공공공사의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악화 되면서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수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전북개발공사가 집행한 턴키 방식의 전주 장동유통단지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는 J컨소시엄과 Y컨소시엄 등 전북소재 2개 컨소시엄만이 참가했다.

이 공사는 예산액이 417억원으로 지난 4월 입찰공고될 당시만 해도 K건설, S건설 등 몇몇 중견업체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중견업체는 수익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채산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일찌감치 입찰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말 입찰이 집행된 성남 판교 아파트 건설공사에서도 당초 입찰참가의사를 밝혔던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이 수익성 문제를 들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처럼 과거 '수주는 곧 수익'으로 통했던 공공공사를 놓고 선별수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공공사의 채산성이 과거와는 달리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된 이후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에 따라 정부발주공사의 계약단가가 실적단가로 활용되면서 예정가격의 단가가 끝없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달부터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고 있고 턴키·대안공사의 가격산식 기준비율도 턴키의 경우 종전 80%에서 70%로, 대안은 80%에서 75%로 각각 하향 조정 돼 운용되고

있다.

또 100억원 이상 적격심사제 공사의 낙찰하한율도 종전 83%에서 80%로 낮아졌다.

내년부터는 실적공사비 적용비율이 50%로 늘어나 전체 1,857개 공종 가운데 절반인 928개 공종에 실적공사비가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축공사뿐 아니라 구조물을 포함한 토목공사에서도 실행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공사들이 발주되고 있다”면서 수익성을 감안한 선별수주 전략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향후 경영에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반기 건설업 임금
5.3% ↑**

노동부, '임금교섭현황' 발표

| 올 상반기 건설업의 임금이 지난해보다 5.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임금교섭타결 현황'에 따르면 100명 이상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은 전년 대비 5.2%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보다 0.5%p 상승했다.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은 3.7%로 민간부문 5.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은 전체 164개 사업장

중 55개 사업장이 임금교섭을 타결했고, 임금은 전년 동기에 비해 5.3% 올랐다.

그러나 건설경기 회복지연 등으로 건설업종은 부동산 및 임대업 5.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1%, 건설업 0.7% 등 임금상승률이 감소했다.

지금까지 임금교섭 진행이 완료된 사업장 비율, 즉 진도율은 전체의 24.2%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3%보다 낮다.

이는 올해 5·31지방선거와 월드컵 등 대규모 행사와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임금교섭 지연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진도율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29.5%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 18.7%보다 10.8%p 높고 임금인상률 역시 노조가 없는 사업장(5.5%)이 노조가 있는 사업장(5.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동결 및 하향조정 사업장 비율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17.8%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 14.4%를 앞선다.

이는 경영사정이 안 좋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기업 경영난 극복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임금을 동결하거나 하향조정한 사업장은 전체의 15.7%(240/1,530곳)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0%(344/1,635곳)보다 5.3%p 줄었다.

규모별로는 대부분 사업장의 임금

인상률이 전년 동기보다 소폭 상승하는 추세 속에 5,000명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 임금인상률보다 2.4%p 높은 6.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1,000~5,000명 미만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은 4.3%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임금인상률 4.4%보다 소폭 떨어졌고, 나머지 1,000명 이하 사업장들은 5.0~5.5%로 나타났다.

**현장 기술인력 2만
명 재교육**

정부, 37개 맞춤형 과정 도입

|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160억원을 투입, 2만여명의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신규 9건, 계속 28건 등 37건의 현장기술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의 현장인력 재교육사업은 산업체에 재직하는 기술인력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에 총사업비의 75%를 5년간 지원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신규지원과제 9건에는 5년간 매년 3억원의 재교육비가 지원되며 주관기관과 7월 중 협약을 체결, 단기

· 중장기, 집합·원격(on-line)· 방문지도, 학위과정 등 수요자에 맞춰 재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이다.

계속지원과제 28건은 길게는 5년 차 짧게는 2년차 인력에 지원되는 재교육사업으로 올해 5억원의 재교육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LNG 도입 가스공사로 일원화

산자부, 시장여건 변화 반영

오는 2012년까지 국내에 필요한 단기 및 중기 LNG물량의 도입권이 한국가스공사로 일원화된다.

이는 대림산업, 포스코 등 추가로 LNG 직도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토록 하겠다는 산자부의 기존 LNG 도입정책이 전면 수정된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안철식 에너지산업본부장과 가스공사 이병호 부사장, 포스코 장현식 전무, 남부발전 김선기 관리본부장, 대림산업 등 LNG 직도입 관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2012년 까지 국내에 필요한 LNG물량 도입의 주체를 가스공사로 일원화하고 가스공사가 책임지고 LNG를 도입하도록 결정했다.

또 오는 2013년 이후 도입물량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국제 LNG시장이 구매자 중심에서 판매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데다 LNG 도입선이 제한적이고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점을 반영,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스공사가 국제시장에서 구축한 브랜드 파워를 최대한 활용해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GS칼텍스의 경우 오는 2008년부터 약 190만톤의 LNG를 직도입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하면서 가스공사로부터 저장탱크를 임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었는데 다른 직도입 희망사업자와 마찬가지로 2012년까지의 추가 LNG 물량에 대해서는 가스공사로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지난 5월 29일 산자부, 가스공사, 발전사, 직도입자 등 관계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6월 7일 산자부 자체 회의를 통해 도입창구를 가스공사로 일원화할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일원화 결정에 따라 오는 2012년 까지 LNG 도입주체로서 올해 중 호주 NWS와 연간 50만톤의 중기계약 연장을 체결하고 MLNG와의 중지계약을 연장 협상, 카타르와의 도입계약 협상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기 반응 스프링클러 확대

방재청, 숙박시설·극장 등 대상 분기배관 성능검증 강화도

앞으로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병원 입원실, 영화관 등을 신축할 때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살수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과 관련된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설치기준을 새로 규정한 국가화재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방재청은 우선 야간에 잠을 자는 곳이나 화재 때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병원의 입원실, 숙박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영화관 등에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의무화했다.

자동식 소화기 설치대상 가운데 아파트 발코니의 보조주방은 제외하고, 감지부 및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위치도 개선키로 했다.

의료시설이나 노약자·유아시설 등의 경우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을 종전 바닥면적 100㎡에서 50㎡로 조정했다.

옥내 소화전설비의 경우 가압수조장치 설치기준에 전원이 없어도 가동할 수 있는 가압수조방식을 신설했다.

특히 방재청은 각종 소화설비의 분기배관은 소방검정공사나 성능시험기관의 검증을 거친 제품을 쓰도록 개정했다.

또한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을 천장에 설치할 경우 반자(각종 설비관계의 배선·배관을 감추고, 소리·열·기류를 차단 또는 흡수하기 위

해 설치한 시설)의 재질로 불연재료는 물론 준불연재료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동화 탐지설비는 건축물의 수평거리 50m 범위에서 2개 이상의 계단이나 경사로가 있을 경우 각각의 경계구역을 설정, 화재가 발생하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토록 했다.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나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캐비닛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계급의 우월성을 강조한 말 - 아마추어

사회 어느 분야든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다. 프로는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하고, 아마추어는 그것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 즉 애호가 정도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아마추어의 원뜻과 그 어원은 어떻게 될까

'아마추어amateur'는 라틴어 'amator'에서 비롯되었으며 영어 'lover'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뜻한다.

처음 '아마추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근대 스포츠가 시작된 영국에서였다. 18세기 후반, 자본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한 영국에서는 상류 계급의 자녀들이 사립학교 public school에서 지도력을 키웠는데, 그들의 교육과정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목이 바로 스포츠였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클럽을 결성해서 스포츠를 계속 즐겼는데, 이들 클럽은 상류 계급의 선수들은 '젠틀맨 gentleman', 노동자 계급의 선수들은 그냥 '플레이어 player'라고 불러서 분명한 차별을 두었다. 이렇게 상류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차별을 의미하는 말로 '아마추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일을 하지 않고도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상류층 젠틀맨들은 순수한 여가 시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스포츠 활동을 했고, 그를 강조하는 말이 바로 '아마추어리즘'이었다.

이런 젠틀맨의 주장은 1879년 성문화되기에 이르렀는데 보트 레이스의 경기위원회에서는 아마추어를 이렇게 규정한다.

다음 사람은 아마추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 상금을 목적으로 프로와 함께 경기한 일이 있는 사람,
- 생계의 수단으로 가르치고 코치하고 원조한 일이 있는 사람,
- 임금을 받으며 보트의 건조에 종사한 사람.

그 후 이러한 아마추어리즘을 규정한 내용은 근대 올림픽의 신조가 되었다.

계급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시작된 아마추어리즘. 하지만 지금은 프로의 하위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아무튼 그 어떤 보상도 이득도 바라지 않고 오직 좋아서 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임에 틀림없다.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